

여성 징병제 선호 분석: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하는가?*, **

박진수(덕성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 전공 부교수)***

이한수(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요약

이 연구는 여성 징병제에 대한 유권자 선호를 분석한다. 누가 여성 징병제를 선호하는가? 우리는 여성 징병제에 대한 선호가 성별과 세대, 그리고 이념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복합적인 대상이라고 본다. 특히, 우리는 세대와 이념에 따라 성별이 여성 징병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르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을 경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이 연구는 2021년 5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성 징병제에 관한 설문 결과를 분석한다. 이 논문의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남성에 비해 여성이, 보수에 비해 진보적인 유권자들이 여성 징병제에 동의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이 연구는 여성의 여성 징병제 동의 효과가 보수와 기성세대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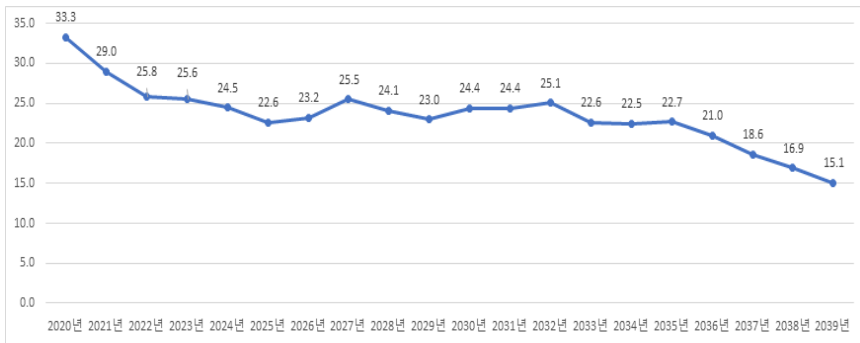
▶ 주제어: 여성 징병제, 정책선호, 젠더, 세대, 이념

I. 쟁점으로서의 여성 징병제

여성 징병제는 국방안보 그리고 정치사회 측면에서 우리 사회의 중요 쟁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방안보 측면에서 여성 징병제는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미래 병력자원 부족을 대비하는 대안 중 하나로 고려된다. <그림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해 가용한 병역자원 역시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그림 1> 병역의무자 변화 예상

(단위: 만 명)



출처: 국방부 제출 자료, 감사원(2021), p. 27에서 재인용.

50만 명(간부 20만 명, 병사 30만 명)의 병력 규모를 목표로 하는 『국방개혁 2.0』을 기준으로 한다면, 1차 병력 부족은 2025년에 나타나고, 이 위기를 잘 헤쳐나간다고 하더라도 병역자원이 20만 명 이하로 떨어지는 2030년도 중반이 되면 더 큰 병력 부족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고시성 2020; 송윤선·이웅 2020). 인

* 세심한 논평으로 논문 완성에 도움을 주신 익명의 심사자분들과 자료를 제공해 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3A2A01089543).

*** 제1저자, jinsoopark93@duksung.ac.kr

**** 교신저자, hanslee@ajou.ac.kr

구감소에 따른 병력 부족이 불가피해지는 상황에서 여성 인력 활용을 극대화하는 방안이 제기된다(박종택 2021; 송윤선·이웅 2020; 이웅 2020). 예를 들어, 송윤선·이웅(2020, 37)은 여성의 군 참여 확대를 “향후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남성 병역자원의 감소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여성의 군 참여 확대를 넘어 여성에게도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고 징병하는 여성 징병제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한다. 이웅(2020, 85)은 “국민 개병제를 시행하는 타국의 사례나 국내법적 근거로 볼 때 여성들에게 필요 시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국가적 입장에서는 정당한 조치이다. 양성 평등 차원에서도 타당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주장한다. 고시성(2020, 31) 역시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확대 추세에 부응하고 저출산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군의 여군 인력을 확대하고 나아가 여성에게도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정책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여성 징병제는 단순한 국방안보 쟁점만이 아니라 정치사회의 중요 쟁점이기도 하다. 청와대는 2021년 6월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병역제도 개편 논의는 “...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한 상비병력 충원 가능성”과 “군사적 효용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특히 여성 징병제는 “병력의 소요충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어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사안”임을 명확히 했다(남지현 2021).

실제로 여성 징병제를 도입한 국가들의 경우 이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가 존재하였다. 2013년 여성 징병제 도입을 결정한 노르웨이의 경우 국민의 66%(남성 71%, 여성 61%)가 여성에게도 병역을 부과하는 성 중립적 징병제를 찬성하고 있었다(Norwegian Ministry of Defence 2013, 43). 2016년 징병제를 재도입하면서 남성과 여성 모두를 징병의 대상으로 규정한 스웨덴 역시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 징병제를 재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여론조사 응답자의 72%가 동의하였으며, 남성과 여성 모두를 징병의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더 많은 87%의 사람들이 동의하였다(The Local 2016).

따라서 여성 징병제 문제는 군사적 효용성과 안보적 필요 등의 검토와 더불어 사회적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는 여성 징병제에 대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여성 징병제에 대한 인식을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여성 징병제를 누가 찬성하고 있으며, 누가 반대하고 있는지 분석하여 사회적 인식 구조 차이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여성이 남성보다, 진보가 보수보다 여성 징병제에 우호적임을 밝히고 있다. 특히, 본 연구의 결과는 남성은 여성 징병제에 우호적이며, 여성은 비우호적일 것이라는 사회적 통념이 잘못된 것임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우리는 여성 징병제에 대한 성별 효과가 MZ세대보다는 40대 이상의 기성세대에서, 진보층보다는 보수층 내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한국사회의 여성 징병제 논의 과정을 살펴본다. III장에서는 여성 징병제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면서 여성 징병제에 관한 우리 사회의 인식 차이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요인을 도출하고, IV장과 V장은 이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검증한다.

II. 여성 징병제 논의 과정

한국은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하여 국민개병제도(國民皆兵制度)를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병역법」 제3조 제1항에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라고 명시함으로써 남성만이 징집의 대상임과 병역의무의 대상임을 밝히고 있다.

남성만의 징병제에 대한 반발과 여성 징병제에 대한 요구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999년 ‘군 가산점 제도’가 위헌결정을 받은 이후이다. 1999

년 이전까지 국가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제대군인이 채용시험에 응시한 때에 필기시험의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5% 안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하는 군 가산점 제도를 통해 군 복무를 수행한 사람에 보상을 제공하였다. 1998년 8월 여성과 장애인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1999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로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에 대한 위헌결정을 내렸다.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의 위헌결정 이후 일부의 사람들은 남성만 징병하는 제도에 반발하여 여성 징병제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들 중 일부는 남성만의 징집을 규정한 「병역법」 제3조 제1항이 헌법이 정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1999년 12월 처음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이후 비슷한 청구가 이어졌다.

여성 징병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확산하자 정치권에서도 여성 징병제를 포함한 병역제도의 변경을 위한 제안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고3 여학생이 남성 단체 회원 한 명과 함께 헌법소원을 내면서 여성 징병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던 2005년 한나라당 박세환, 송영선 의원 등이 남녀 공동 징병제와 여성 지원병제를 제안하였다. 2005년 9월 남녀 공동 징병제 도입을 주장하던 박세환 의원은 “여성에 대한 병역의무 부과 등에 관한 청원”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소개하였지만, 법안으로 발의되지는 않았다. 송영선 의원은 2005년 9월과 2008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여성 지원병제를 도입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지만, 임기만료 폐기되었다. 송 의원은 여성 병역 의무화에 반대하지만, 여성도 국방의 기회를 얻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여성 지원병제를 주장하였다(김정하 2005). 여성 지원병제는 “여성의 경우 현역 간부(장교 및 부사관)에 한해 국방의 의무를 가능케 한 기존 법률을 현역병 및 보충역, 예비역으로 확대함으로써 여성들도 지원에 의해 현역병, 대체복무, 예비군으로의 복무가 가능하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었다(송영선 외 2005).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11월 국방부 역시 병역자원 부족 등을 이유로 여성 지원병제 도입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하며 2011년까지 검토 작업을 끝내고 시행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군 가산점 제도 추진 논란에 이어 여성 지원병제에 대한 사회적 찬반 논란이 거세지자 검토 작업을 중단하였다.

여성 징병제에 대한 논의는 2010년대 초반 남성만의 병역의무를 규정한 「병역법」 제3조 제1항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을 계기로 다소 주춤하게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2010년 10월(2006헌마328), 2011년 11월(2010헌마460), 2014년 2월(2011헌마825) 병역법 제3조 제1항이 헌법에 부합한다는 합헌결정을 내리며 3건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014년 결정을 살펴볼 때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남성만을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은 남녀 간의 신체적 특징의 차이에 기초하여 최적의 전투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70개의 징병제 시행 국가 중 여성 징병제는 이스라엘 등 극히 일부 국가에서만 실행되며, 이스라엘의 경우도 복무기간 및 병역거부 조항에서 남녀 간의 차이를 두고 있으며, 여성의 전투단위 근무도 이례적이라고 판단했다. 셋째, 여성을 징병할 경우 필요한 시설을 갖추기 위한 경제적 비용이 많이 들고, 남성 중심의 군 문화 속에서 성범죄나 성적 긴장 관계에서 발생하는 기강 해이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 이후 다소 주춤하던 여성 징병제에 대한 논의는 2016년에서 2017년 사이 노르웨이, 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이 여성 징병제를 시행하거나, 도입하기로 결정 혹은 검토하고, 이러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다시금 사회적으로 확산하였다. 2017년 8월 3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여성 징병제 청원이 처음 올라온 이후 관련 청원이 계속해서 제기됐다. 특히 2021년 4월 19일 청원은 29만 명의 동의를 얻어서 청와대가 정한 청원 답변 기준인 '30일 이내 20만 명 동의'를 충족하였다. 한편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도 2020년 10월과 2021년 4월 여성 징병제 관련 청원이 제기되었고, 이 중 2021년 4월 청원은 검토 요건인 10만 명을 넘어 소관위원회인 국방위원회와 관련 위원회인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여성 징병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논의가 확산하자 정치권도 다시 여성 징병제 관련 논의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2019년 4월 하태경 의원과 이준석 바른미래

당 최고위원은 여성 지원병제와 군 가산점 제도 부활을 주장하였다. 그들은 여성도 사병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군 복무를 수행한 남성과 여성에게 군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주장하였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은 모병제 도입과 함께 남녀평등복무제를 제안하였다. 그가 제안한 남녀평등복무제는 남녀 모두 40일에서 100일의 기초 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는 것이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국민의 힘 대선주자들이 여성 징병제를 두고 엇갈린 입장을 발표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명확한 반대를 표시하는 등 여성 징병제가 중요한 정책적 쟁점으로 부각하기도 하였다.

III. 여성 징병제에 관한 사회 인식 차이의 구조

1999년 이후 여성 징병제 문제가 우리 사회의 주요한 쟁점으로 지속해서 논의되고 있었던 것과 달리, 여성 징병제에 대한 학문적 검토는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선, 여성 징병제에 관한 연구 자체가 많지 않다. 2022년 8월 기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한국한술지인용색인(KCI)에 ‘여성 징병제’를 핵심어로 검색한 결과 6편만이 등록되어 있다. 특히, 여성 징병제에 관한 우리 사회의 인식 차이 구조를 밝히고 경험적으로 검증한 연구가 없다. 소수의 여성 징병제에 관한 연구들은 이스라엘, 노르웨이, 스웨덴 등 여성 징병제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들의 사례에 관한 연구 혹은 이들 국가와 한국과의 비교 사례연구이거나(권인숙 2008; 박진수 2018; 2019; 조상근 외 2022), 여성 징병제 청원 분석을 통해 병역-시민권의 관계를 고찰한 연구이다(김엘리 2022). 김동훈·김법현(2022)이 빅데이터를 통한 여성 징병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분석하였으나, 여성 징병제가 사회적으로 찬·반의 의견 대립과 사회적 갈등의 소지가 큰 쟁점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 나타난 한계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여성 징병제에 관한 우리 사회의 인식 차이 구조를 밝히고, 이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1. 성별에 따른 여성 징병제 선호

우선 이 절에서는 여성 징병제에 관한 연구뿐만 아니라 병역제도 연구, 국방에서의 젠더에 관한 연구 등으로 선행연구 검토 범위를 확장하여 우리 사회의 인식 차이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핵심어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여성 징병제에 관한 첫 번째 사회 인식 차이의 구조는 쉽게 예상되는 것처럼 젠더 요인이다. 조관호(2021)는 병력 부족 해소와 성평등 관점에서 여성의 의무복무 문제를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젠더 이슈로서 더 두드러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박진수(2018)는 노르웨이와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이 성평등 강화와 안보 역량 강화라는 관점에서 성 중립적 징병제를 도입한 것과 달리, 여성 징병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논의가 소모적인 젠더 갈등의 모습을 보인다고 주장한다. 윤보라(2013, 42)는 한국의 병역제도 논쟁을 “‘군대 가서 고생한 남자’와 ‘편하게 놀면서 필요할 때만 권리를 주장하는 여자’라는” 이분법적 대결로 묘사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나타난 여성 징병제에 대한 보편적 인식은 여성은 반대하고, 남성은 찬성한다는 것이다. 송윤선·이웅(2020, 40)은 여성의 의무복무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제기되었을 때 여성을 중심으로 한 강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었고,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획기적으로 전환되지 않는 한 여성 징병제 도입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라고 주장한다. 반면 남성들은 남성만 군대 가는 것을 차별이라 인식하고 있으며, 여성도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는 듯하다. 남성 3,000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9.7%의 응답자가 남성만 군대 가는 것을 차별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56.8%가 여성도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였다(마경희 외 2018).

그러나 여성의 군 참여 확대와 더 나아가 여성 징병제를 주장하는 목소리를 내는 여성들도 있다. 이김정희(2003), 류숙렬(2003), 오세라비(2018) 등은 여성들이 군대 문화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과 군내 젠더 평등의 강화를 고려할 때, 여성 징병제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성의 사회적 참여가 확대되고 여성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여성의 군 참여 확대를 요구하는 주장도 발견된다(권인숙 2008; 윤지원 2016).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성별에 따른 여성 징병제에 대한 선호 차이가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2. 이념에 따른 여성 징병제 선호

여성 징병제에 관한 사회 인식 차이의 두 번째 구조로 이념 요인을 고려할 수 있다. 이념적 측면에서 평등과 변화에 대해 긍정적인 진보는 남성과 여성 모두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할 가능성이 높다. 유럽과 미국의 여성 징병제 및 여성의 군 참여 확대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대체로 진보세력은 여성 징병제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다(박진수 2018; 2019). 이들은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증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성평등 강화 차원에서 여성의 군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고 주장한다.

실제로 노르웨이에서 여성 징병제 도입 법안을 주도한 것은 사회주의 정당 소속의 정치인들이었다. 2007년 7월 성 중립적 징병제를 제안하고 논의를 주도한 것은 노동당 출신 여성 의원으로 연립정부의 국방부 장관을 역임하고 있던 스트롬-에릭센(Anne-Grete Strøm-Erichsen)이었으며, 2012년에 같은 문제를 다시 부각한 것 역시 노동당 출신의 국방장관인 에이데(Espen B. Eide)였다(박진수 2019). 2013년 여성 징병제 법안을 주도한 노르웨이 노동당의 구스타브센(Laila Gustavsen)은 “군대는 성별과 관계없이 최상의 자원을 뽑을 수 있어야” 하며 “권리와 의무는 누구에게나 동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Fouche 2013).

이와 반대로 일반적으로 보수는 여성의 군 참여와 여성 징병제에 대하여 부정적 태도를 보일 것이다. 우선 기존 질서와 관행을 유지하고자 하는 보수의 이념적 가치에 기반한다면, 성별 분업이나 성역할에 대한 기존 인식은 보수적인 유권자가 여성도 안보를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기 힘들게 할 것이다. 또한 공동체의 안정적 유지와 안보를 주장하는 보수의 입장 역시 여성을 군대에

징병하고 전쟁과 전투에 내보내자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다.

보수의 여성 징병제에 대한 입장은 2016년 미국에서 있었던 여성의 ‘병역선발제도(SSS: Selective Service System)’ 등록 논의 과정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박진수 2019). 미국은 1973년 징병제를 폐지하였지만, 전시에 필요한 군인을 선발하기 위하여 징병 대상자의 정보를 미리 등록하게 하는 SSS를 유지하고 있다. SSS의 등록의무는 남성에게만 부과되고 여성은 면제되었다. 그러나 2015년 말 여군의 전투 참여 배제가 철폐된 이후, 2016년 상원과 하원에서 여성도 SSS에 등록하게 하는 법안이 논의되었다. 보수 성향의 의원들과 보수단체는 여성의 SSS 등록을 격렬하게 반대하였다. 공화당의 강력한 보수주의자인 크루즈(Ted Cruz) 상원의원은 “우리의 딸들을 군대에 징병하고, 전쟁에 내보내고, 전투에 밀어 넣는” 법안에 양심상 투표할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보수단체인 Heritage Action for America는 “징병을 통해 우리의 딸들을 전투에 밀어 넣는 것을 허락하는 것은 워싱턴이 군사적 목적과 준비태세보다 자유주의적 사회공학(liberal social engineering)에 더 많은 가치를 두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여성을 SSS에 등록하는 법안에 찬성하는 의원들을 압박하였다(Steinhauer 2016).

더 나아가 이 논문은 성별이 여성 징병제 선호에 미치는 영향력이 이념에 따라 달리 나타날 가능성을 검토한다. 특히 우리는 진보적인 여성과 진보적인 남성의 여성 징병제 선호 차이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정치철학의 측면에서 좌파 혹은 진보라는 이념의 주요 구성 요소 중 하나는 변화와 사회적 평등이다(Heywood 2019; Jost et al. 2009; McClosky and Zaller 1984). 실제로 2022년 한국정치학회가 시행한 한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스스로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일수록 더 평등주의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¹⁾ 또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진보와 보수의 차이를 변화와 평등을 기준으로 이해

1) “양극화에 대한 일반 국민 인식 조사”이며, 설문 내용은 ‘성적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차별을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와 ‘가족 및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해악이므로 동성애를 절대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에 대한 선호를 물었다.

할수록 이념을 여성의 사회참여와 같은 정책 선호에 연계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경미 외 2012).²⁾ 여성 징병제는 남성과 여성을 동등하게 징병하는 것으로 변화와 평등이라는 진보의 핵심 논리에 잘 부합한다. 결국, 여성 징병제에 대한 진보적인 여성과 진보적인 남성의 선호 차이는 크지 않을 것이다.

이와 달리 우리는 보수적인 여성과 보수적인 남성의 여성 징병제 선호 차이는 상대적으로 더 두드러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사상의 측면에서 보수주의는 기존질서에 대한 방어가 핵심 가치이다(Heywood 2019; Jost et al. 2009). 지금까지 남성 징병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 성역할 측면에서도 이를 유지하는 것이 보수적 가치에 부합할 것이다. 하지만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과 관련하여 여성도 이러한 이념적 논리에 동의할 것인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즉, 남성과 여성의 성별 분업이나 성역할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여성이 이념적 논리에 기대어 남성과 동일한 정책 선호를 표할 것인가는 불분명하다. 예를 들어, 비록 보수적이라고 할지라도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는 여성이 보수적인 남성에 비해 좀 더 진보적인 선호를 보일 수 있다. 이러한 논리를 확장하여 우리는 보수적 여성과 보수적 남성 사이에서 여성 징병제에 대한 선호 차이가 더 두드러질 것이라고 본다. 즉, 만일 남성에 비해 여성이 여성 징병제에 대해 더 찬성하는 경향이 있다면, 이 차이는 진보적인 유권자들보다 보수적인 유권자들 사이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다.

3. 세대에 따른 여성 징병제 선호

여성 징병제에 관한 사회 인식 차이의 세 번째 구조는 세대 요인을 통해 만들어질 수 있다. 이 연구는 기성세대에 비해 젊은 세대가 여성 징병제에 찬성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라고 본다. 이 주장은 세대에 따른 공정성과 성역할 인식의 차이에 기반한다(김동훈·김법현 2022). 예를 들어, 조관호(2021)는 성별에

2) 통계적 유의 수준을 0.10으로 하였을 때 그러하다.

따른 인식 차이와 더불어 세대에 따른 인식 차이로 인해 여성 징병제 도입과 군복무 형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극심한 신자유주의 경쟁에 직면하며 취업난과 경제난에 노출되고 있고, 부모 세대보다도 못 사는 첫 번째 세대가 된 MZ세대들은 기성세대보다 공정성에 대해 더욱 민감하다(박진수 2019). 한편, 마경희 외(2018)의 연구에 따르면 전통적 성별 분업과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남성적 역할과 기질에 부합하는 '전통적 남성성'의 비중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높아지고(20대 29.4%, 30대 34.4%, 40대 47.4%, 50대 54.7%), 반대로 '비전통 남성성'은 연령이 낮아질수록 높아졌다(20대 38.5%, 30대 27.1%, 40대 19.3%, 50대 12.0%).

더 나아가 우리는 성별이 여성 징병제 선호에 미치는 영향력이 나이나 세대에 따라 달리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MZ세대 혹은 젊은이들이 공정성과 성평등을 전반적으로 공유하고 있다면, 성별에 따른 여성 징병제 선호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반면, 공정성과 성평등에 대한 기성세대의 인식이 상대적으로 이질적이라면, 성별에 따른 여성 징병제 선호 차이가 기성세대에서 더 두드러질 것이다. 예를 들어, 여성이 여성 징병제에 찬성하는 경향이 있다면, 젊은 세대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여성 징병제 찬성 가능성 차이가 기성세대에 비해 낮게 나타날 것이다. 다음 장은 이번 장에서 도출된 여성 징병제에 관한 이 논문의 주장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자료를 소개한다.

IV. 변수와 자료

이 연구는 여성 징병제에 대한 대한민국 유권자들의 선호를 분석한다.³⁾ 즉, 이 어지는 분석의 종속변수는 여성 징병제에 대한 유권자 선호이다. 한국갤럽조사연

3) 이를 위해 이 논문은 2021년 5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다. 조사기간은 2021년 5월 25~27일이며,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하였다. 조사 대상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이며, 1,003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표본오차는 $\pm 3.1\%$).

구소는 여성도 징병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응답자들의 선호를 물었다.⁴⁾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효 응답자들 중 남성만 징병해야 한다는 응답이 약 51.02%, 남성과 여성 모두 징병해야 한다는 응답이 약 48.97%로 나타났다. 이 수치들을 보면 여성 징병제에 대한 유권자 사이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상적으로 여성 징병제에 대해 남성의 찬성과 여성의 반대가 높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으며, 이러한 주장 역시 존재한다(마경희 외 2018; 송윤선·이웅 2020). 이 연구가 분석하고 있는 자료를 살펴보면 남성들 사이에서 남성만 징병해야 한다는 의견이 약 54.13%, 여성도 징병해야 한다는 의견이 약 45.86%인 반면, 여성들 사이에서는 남성만 징병해야 한다는 의견이 47.64%, 여성도 징병해야 한다는 의견이 52.35%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 따르면 반수 이상의 남성이 여성 징병에 반대 의사를, 그리고 반수 이상의 여성이 여성 징병제에 대한 선호를 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수치를 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여성 징병제를 찬성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성이 남성에 비해 여성 징병제를 더 선호하는가를 엄정하게 파악하기 위해 이어지는 분석에서 성별을 하나의 독립변수로 하여 그 영향력을 추정한다.⁵⁾

정책 선호는 다양한 요인들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특히 기존 연구에 따르면 이념이나 당파성 같은 정치성향은 정책 선호를 설명하는 유의미한 변수이다(이한수 2022). 앞서 살펴보았듯이 여성 징병제에 대한 선호 역시 유권자들의 정치성향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다. 이어지는 분석은 정치성향의 정책 선호에 대한 영향력을 추정하기 위해 분석 모형에 이념과 당파성을 포함한다. 우리는 이념을 설문 응답자들의 자기 평가로 측정하며,⁶⁾ 당파성은 지지 정당으로 측정한다

4) 설문은 “현재 징병제는 남성만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최근에는 여성도 징병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귀하의 생각은 다음 중 어디에 가깝습니까?”이며, 선택항은 “남성만 징병해야 한다”, “남성과 여성 모두 징병해야 한다”이다. 이 연구는 남성과 여성 모두 징병해야 한다는 의견을 1로, 남성만 징병해야 한다는 의견을 0으로 설정하였다.

5) 여성을 1로 남성을 0으로 설정하였다. 전체 설문 응답자들 중 여성이 대략 49.45%, 남성이 대략 50.54%이다.

6) 설문은 “... 본인의 정치적 성향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이며, 선택항은 “1.

다.7) 당파성의 경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를 각각 이항 변수로 처리한다.8) 특히 이 논문은 이념에 초점을 둔다. 이어지는 분석에서는 이념과 성별의 교차 변수를 통해 성별의 여성 징병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이념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가를 확인한다.

이 연구는 여성 징병제에 대한 선호가 성별과 이념에 따른 차이뿐만 아니라 세대 혹은 연령에 따른 차이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경험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연령과 세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또한, 성별과 연령 그리고 성별과 세대의 교차항을 통해 성별과 나이 혹은 세대에 따른 선호의 차이를 확인한다. 이 연구는 MZ세대를 30대 이하로 설정한다. MZ세대는 밀레니엄 세대와 Z세대의 합성어이며, M세대는 청년기를 2000년대에 맞이한 세대를 말한다.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는 M세대를 1981~96년생으로, Z세대를 1997년부터 2012년생으로 구분한다.9) 이 구분에 따르면 대략 만 40세 미만을 MZ세대로 볼 수 있다.10)

여성 징병제 선호는 국제 정세나 군대에 대한 인식에 영향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군 생활이 인생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여성 징병제를 찬성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다. 이 연구는 군 생활이 인생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의견을 분석 모형에 포함한다.11) 이와 더불어 국제 정세도 여성 징병제 선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제 정세가 불안정하다고 느끼는 유권자라면 군의 규모가 더 커져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여성 징병제에 찬성할 가능성이 있다.12)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응답자의 개인 경제 상황

매우 보수적," "2. 약간 보수적," "3. 중도적," "4. 약간 진보적," "5. 매우 진보적"이다.

7) 설문은 당파성을 '지지하는 정당'이 있는가로 물었으며, 없거나 모른다고 답한 경우 본인의 성향이 어디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가를 물었다. 두 번째 질문에서도 없거나 모른다고 답한 경우 결측치로 처리하였다.

8) 전체 설문 응답자들 중 국민의힘 지지자는 대략 29.5%이며,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는 대략 34.82%이다.

9) <https://www.pewresearch.org/>

10) 40세 미만은 전체 응답자들 중 약 29.21%이다.

11) 설문은 "일반적으로 군대 생활을 하는 것이 살아가는 데 있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이며, 이 논문이 활용한 선택항은 "1.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4. 매우 도움이 된다"이다.

평가를 고려하기 위해 가계경제 전망을 통제한다.¹³⁾ 이 연구가 고려한 변수들 이외에도 여성 징병제 선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 존재할 수 있으나 설문지의 한계로 인해 본 연구에 포함하지 못하였다.¹⁴⁾

V. 분석 결과

이 연구는 여성 징병제에 대한 유권자들의 선호를 분석한다. <표 1>은 여성 징병제에 대한 선호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 결과를 담고 있다.¹⁵⁾ 이 논문은 우선 여성 징병제에 대한 선호가 성별에 의해 나뉜다는 주장을 검토한다. 이 표의 *기본모형1*과 *기본모형2*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여성 징병제에 동의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모형의 결과에 따르면, 다른 모든 조건을 평균으로 설정하였을 때 여성이 여성 징병제에 찬성할 예측 확률은 51.88% 정도이며, 같은 조건에서 남성의 찬성 예측 확률은 약

-
- 12) 설문은 “앞으로 1년간 국제적인 분쟁이 현재에 비해 다음 중 어떠한 것이라고 보십니까?”이며, 이 논문이 활용한 선택항은 “1. 감소할 것, 2. 비슷할 것, 3. 증가할 것”이다.
- 13) 설문은 “앞으로 1년간 ○○님 님의 살림살이가 현재에 비해 다음 중 어떠한 것이라고 보십니까?”이며, 이 논문이 활용한 선택항은 “1. 나빠질 것, 2. 비슷할 것, 3. 좋아질 것”이다. 이 변수 대신 개인의 경제 수준 평가(하층, 중산층, 상층 등)를 넣어도 주요 결과에는 변화가 없다. 이 연구가 분석하는 설문조사는 개인의 소득 수준이나 교육 수준을 묻지 않았기 때문에 모형에 포함하지 못했다.
- 14) 예를 들어, 성평등 의식 수준과 글릭과 피스크(Glick and Fiske 1996)가 제기한 양가적 성차별주의(Ambivalent Sexism), 즉 적대적 성차별주의(Hostile Sexism)와 온정적 성차별주의(Benevolent Sexism)가 있다. 그동안 양가적 성차별주의는 국내의 중요 이슈인 사회 공정성과 성평등 정책(박상희·김혜숙 2007), 낙태 허용(기나휘·유계숙 2019) 등 사회적 쟁점이나, 여성 지도자에 대한 평가(안미영 외 2005), 유권자의 정치적 행태(김기동 외 2020; 구본상 2021; 구본상 외 2022) 등 정치적 분석 등에서 독립변수로 고려되었다. 또한, 자녀의 유무 역시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딸을 가진 부모들이 그렇지 않은 부모들보다 사회나 기업에서 여성의 역할 확대나 여성의 이슈에 대해서 더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이른바 “딸 효과(Daughter Effect)”(Borrelli-Porta et al. 2019; Dasgupta et al. 2018) 연구는 딸 자녀 유무가 여성 징병제 선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처럼 성평등 인식, 양가적 성차별주의 수준, 딸 효과 등이 여성 징병제 선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설문지의 한계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된 변수들을 포함하지 못하였다.
- 15) 종속변수가 이항 변수이기 때문에 통계 모형은 Logit을 사용한다.

44.64%이다. 이는 여성이 여성 징병제에 더 부정적일 것이라는 일반적인 통념과 배치되는 결과이다.¹⁶⁾

〈표 1〉 여성 징병제에 대한 선호 분석

변수	기본모형1	기본모형2	교차모형1	교차모형2	교차모형3
여성×나이			0.02** (0.01)		
여성×40대 이상				0.65* (0.34)	
여성×이념					-0.17 (0.16)
여성	0.29* (0.15)	0.29* (0.15)	-0.94* (0.53)	-0.15 (0.28)	0.81 (0.51)
나이	-0.00 (0.00)		-0.01** (0.00)		-0.00 (0.00)
40대 이상		-0.18 (0.17)		-0.47** (0.23)	
이념	0.23** (0.09)	0.23** (0.09)	0.24** (0.09)	0.55** (0.09)	0.30** (0.11)
더불어민주당 지지	-0.43** (0.20)	-0.42** (0.20)	-0.45** (0.20)	-0.44** (0.20)	-0.44** (0.20)
국민의힘 지지	-0.32 (0.20)	-0.33* (0.20)	-0.38** (0.20)	-0.35* (0.20)	-0.32 (0.20)
군 생활 평가	-0.23** (0.09)	-0.23** (0.08)	-0.21** (0.09)	-0.22** (0.08)	-0.23** (0.09)
국제분쟁 전망	-0.07 (0.11)	-0.07 (0.11)	-0.07 (0.11)	-0.07 (0.11)	-0.07 (0.11)
가계경제 전망	-0.15 (0.12)	-0.15 (0.12)	-0.15 (0.12)	-0.13 (0.12)	-0.15 (0.12)
상수	0.58 (0.50)	0.46 (0.47)	1.05* (0.54)	0.57 (0.48)	0.37 (0.54)
N	672	672	672	672	672
AIC	918.49	918.34	914.6	916.87	919.33

주: 표 안의 숫자는 회귀계수,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이다. N은 관측수이다. AIC는 Akaike Information Criterion이다. 통계적 유의성 **은 < 0.05를, *은 < 0.10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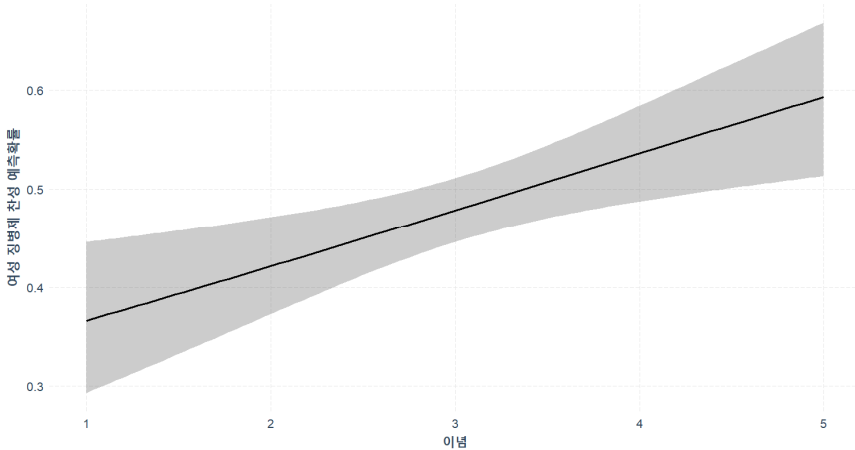
16) 이러한 결과에 대한 이론적 해석이 필요하다. 젠더 평등적 관점에서 여성의 군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는 일부 여성 정치인과 운동가의 주장에 일반 여성 유권자가 반응하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혹은 젠더 갈등적 측면에서 남녀평등을 바라다면 여성도 군대 가라는 일부 남성의 주장에 대한 반발적 반응으로 여성이 여성 징병제에 찬성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론은 설문 의 질문의 한계로 본 연구에서 검증하지 못하였고 추후 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여성 징병제에 대한 선호가 성별뿐만 아니라 세대에 따라 나뉜다고 주장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는 MZ세대를 40대 미만으로 간주하고 40대 이상을 1로 40대 미만을 0으로 설정하여 모형에 포함한다. *기본모형2*는 세대 변수를 담고 있다. 이 모형의 결과에 따르면, 40대 이상의 유권자들이 여성 징병제에 대해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경향을 보여주지 않는다. 이 결과는 세대가 여성 징병제 선호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 연구의 주장을 경험적으로 뒷받침하지 않는다. 또한, 세대가 아닌 나이 변수를 모형에 포함하였을 때에도 나이에 따라 여성 징병제에 대한 선호가 유의미하게 변화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선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념이 여성 징병제 동의에 미치는 영향력은 논쟁적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이 연구는 이념 변수를 분석 모형에 포함한다. <표 1>의 결과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자신을 진보적이라 평가할수록 여성 징병제에 대해 동의하는 편이다. 예를 들어, *기본모형1*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른 모든 조건을 평균으로 설정하였을 때, 자신이 매우 보수적이라고 답한 유권자가 여성 징병제에 동의할 예측 확률은 약 36.91%이지만, 자신을 매우 진보적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여성 징병제에 동의할 가능성은 약 59.56%에 달한다. <그림 2>는 이러한 양상을 잘 보여준다.¹⁷⁾

17) <그림 2>에서 실선은 예측 확률을, 음영은 90% 신뢰구간을 의미한다.

〈그림 2〉 이념에 따른 여성 징병제 찬성 예측 확률



이 논문은 이념과 더불어 당파성을 정치성향 변수로 모형에 포함한다. 위 〈표 1〉의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첫 번째와 두 번째 모형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와 두 번째 모형에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여타 정당 지지자와 무당파 유권자에 비해 여성 징병제에 반대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제한적이지만 이 결과는 여성 징병제라는 쟁점이 아직 당파성을 중심으로 선호가 두드러지게 나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쟁점에서 이러한 양상이 관찰될 가능성이 크다(이한수 2017).

〈표 1〉을 살펴보면, 유권자들의 군대 생활에 대한 평가가 여성 징병제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유권자들은 군대 생활이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수록 여성 징병제에 반대하는 경향을 보인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모형에서 군 생활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의 경우 여성 징병제 동의 예측 확률이 약 60.23%이지만, 군 생활이 매우 도움이 된다고 답한 응답자의 경우 이 확률은 42.98%이다. 이 결과는 군 생활로 인한 도움이 있다면 그 혜택을 모두가 공평하게 누려야 한다는 ‘긍정적 공정 인식’보다 군 생활로 인한 불이익이 있다면 그 불이익은 모두가 동일하게 감당해야 한다는 ‘부정적 공

정 인식'이 더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제분쟁이나 가계경제 전망 변수들은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는다.

이 연구는 성별의 여성 징병제 선호 효과가 세대 혹은 나이에 따라 변화한다고 주장한다. 비록 나이나 세대가 여성 징병제 선호에 독립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않을지라도, 세대 혹은 나이는 성별이 여성 징병제 선호에 미치는 효과를 조건짓는 변수가 될 수 있다. <표 1>의 교차모형 결과를 살펴보면, 여성과 나이의 교차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변수가 양의 값을 갖는다는 것은 나이가 증가할수록 성별(여성)이 여성 징병제 선호에 미치는 효과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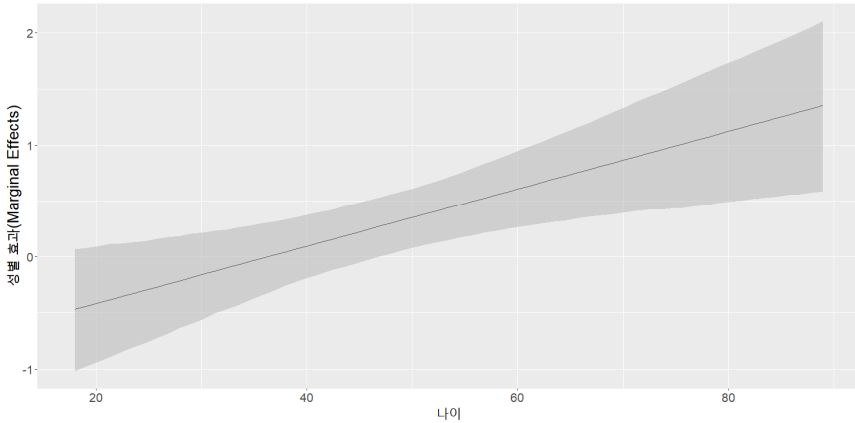
<그림 3>은 나이에 따라 성별이 여성 징병제 찬성에 미치는 효과 변화를 담고 있다(Brambor et al. 2006).¹⁸⁾ 이 그림에서 실선은 성별이 여성 징병제 선호에 미치는 한계효과(marginal effect)를 의미하고 음영은 이 효과의 90% 신뢰구간을 의미한다. 이 그림을 살펴보면 성별이 여성 징병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나이가 증가할수록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40대 중반 이하에서는 성별이 여성 징병제 동의에 미치는 영향력(한계효과)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하지만 40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성별이 여성 징병제에 미치는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며 그 크기는 점차 증가한다.

18) 예를 들어, 모형 $Y = \beta_0 + \beta_1 X + \beta_2 Z + \beta_{12} XZ + \epsilon$ 에서 $Z(\text{나이})$ 를 조건 변수라고 하면, $X(\text{성별})$ 의

$Y(\text{여성 징병제 선호})$ 에 대한 한계효과(marginal effect)는 $\frac{\partial Y}{\partial X} = \beta_1 + \beta_{12} Z$ 가 된다. 즉, 성별의 여성 징병제 선호에 대한 영향력은 나이가 변화함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또한 이 추정치 $(\beta_1 + \beta_{12} Z)$ 의 표준 오차는 $\hat{\sigma}_{\frac{\partial Y}{\partial X}} = \sqrt{\text{var}(\hat{\beta}_1) + Z^2 \text{var}(\hat{\beta}_{12}) + 2Z \text{cov}(\hat{\beta}_1, \hat{\beta}_{12})}$ 이다. 이 수식은 비

록 교차항($\hat{\beta}_{12}$)이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더라도 조건 변수에 따라 한계효과는 통계적 유의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3〉 나이에 따른 성별의 여성 징병제 선호에 대한 영향력 변화



예측 확률을 통해 이를 살펴보면, 여타 조건을 평균으로 설정하였을 때 20세 여성의 경우 여성 징병제에 찬성할 가능성이 약 45.92%이고, 20세 남성의 경우 이 확률은 약 56.48%이다. 반면 60세 여성의 경우 여성 징병제에 동의할 예측 확률은 약 55.13%인 것에 비해 60세 남성의 경우 이 가능성은 약 40.07%로 감소한다. 20세에서 성별에 따른 여성 징병제 찬성 예측 확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지만, 60세의 경우 이 차이는 15.06%이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즉, 이 결과는 나이가 많을수록 성별이 여성 징병제 찬성에 미치는 효과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나이와 마찬가지로 세대가 성별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 변수 인가를 확인한다. 〈표 1〉의 두 번째 교차 모형은 성별과 세대의 교차항을 포함한다. 〈그림 4〉는 해당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¹⁹⁾ 이 그림에서도 앞선 결과와 유사한 양상이 관찰된다. 40대 미만에서 성별이 여성 징병제 선호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지만 40대 이상에서는 이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다. 기성세대에 비해 젊은 세대에서 여성 징병제에 대한 선호

19) 〈그림 4〉에서 점은 추정된 효과를, 선은 90% 신뢰구간을 의미한다.

가 상대적으로 동일적이기 때문에 성별에 따른 정책 선호 차이가 기성세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4〉 세대에 따른 성별의 여성 징병제 선호에 대한 영향력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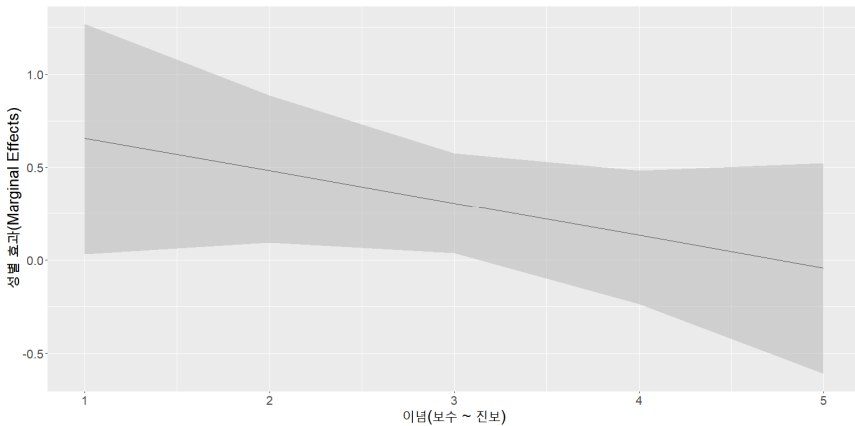
예측 확률을 통해 이 효과를 살펴보면, 여타 조건을 평균으로 설정하였을 때 40대 이상의 여성이 여성 징병제에 동의할 가능성은 약 53.56%이다. 반면, 40대 이상의 남성이 이 정책에 선호를 표할 예측 확률은 41.24%로 그 차이가 대략 12.32%에 달한다. 하지만 40세 미만의 여성이 이 정책에 동의할 가능성은 약 49.23%이고, 같은 세대 남성의 경우 이 확률은 약 53.07%로 그 차이가 상대적으로 작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즉, 여성이기에 여성 징병제에 동의하는 효과는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40대 이상의 세대에서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나이와 세대가 성별이 여성 징병제 선호에 미치는 효과를 유의미하게 조건 짓는다는 이 연구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 논문은 세대 혹은 나이에 따른 여성 징병제 선호 차이와 더불어 이념에 따른 차이를 검토한다. 〈표 1〉의 *기본모형1*과 *기본모형2*를 살펴보면, 여성일수록 그리고 진보적인 유권자들일수록 여성 징병제에 동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념과 성별은 서로 상승 작용을 일으키는가 혹은 상쇄 작용을 일으키는

가? 이 논문은 이념이 진보적일수록 성별이 여성 징병제에 미치는 한계효과가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 표의 교차모형³ 결과를 보면 여성과 이념의 교차항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교차항이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더라도 조건 변수의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수 있다 (Brambor et al. 2006).²⁰⁾ 이를 고려하여 이 연구는 앞선 교차항 분석과 마찬가지로 조건 변수의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그림 5〉는 이념에 따라 성별이 여성 징병제 선호에 미치는 영향력(한계효과)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보여준다.²¹⁾ 이 그림에 따르면, 성별의 여성 징병제 선호에 대한 효과는 이념이 진보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여성이기에 여성 징병제에 동의하는 효과의 크기가 보수적인 유권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유권자들 사이에서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림 5〉 이념에 따른 성별의 여성 징병제 선호에 대한 영향력 변화



20) 자세한 설명은 앞선 각주 18) 참조.

21) 〈그림 5〉에서 실선은 한계효과를, 음영은 90% 신뢰구간을 의미한다.

이념이 성별 효과에 미치는 영향력은 예측 확률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매우 진보적인 여성의 경우, 여타 조건을 평균으로 가정하였을 때, 여성 징병제에 찬성할 예측 확률은 약 58.46%이고, 같은 조건에서 남성이 여성 징병제에 동의할 가능성은 약 59.66%로 유사한 수준이다. 이와 달리 매우 보수적인 여성이 여성 징병제에 동의할 가능성은 약 45.16%지만, 매우 보수적인 남성의 경우 이 확률은 30.19%로 14.97%가량 낮다. 즉,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들 사이에서 성별에 따른 여성 징병제 선호 차이가 미미한 것에 비해 보수적인 유권자들 사이에서 성별에 따른 여성 징병제 선호 차이가 두드러진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논의하였듯이 진보적인 유권자들에 비해 보수적인 유권자들 사이에서 여성 징병제에 대한 선호가 상대적으로 더 이질적이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서 성별 효과가 두드러지게 관찰되는 것으로 보인다.

VI. 결론 및 토론

지난 20여 년간 여성 징병제 문제는 우리 사회와 정치의 중요 쟁점으로 지속해서 논의되었지만, 이에 대한 학술적 검토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여성 징병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차이 구조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는 여성 징병제에 대한 선호를 담고 있는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누가 여성 징병제에 동의하는가를 확인하였다.

이 논문의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진보가 보수보다 여성 징병제에 우호적이다. 또한, 여성이 남성보다 여성 징병제에 더 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남성은 여성 징병제를 찬성하고, 여성은 여성 징병제를 반대할 것이라는 우리 사회의 일반적 통념이 잘못된 것임을 밝히는 것으로서 학술적 의의를 가진다. 더 나아가 우리는 여성 징병제에 대한 남녀 간 선호 차이는 젊은 세대 혹은 MZ세대보다 기성세대에서, 그리고 진보층보다는 보수층 사이에서 더 이질적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이는 여성 징병제 선호에 대한 젠더 차

이가 이념과 세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향후 우리 사회에서 여성 징병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와 논의를 이어갈 때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우선, 여성 징병제 논의에서 젠더 갈등적 시각을 지양하여야 한다. 그동안 여성 징병제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 갈등의 대표적 이슈로 인식되었다. 이는 여성 징병제를 젠더 갈등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일부 사람들의 목소리가 과다 대표되고, 이것이 일부 자극적인 언론과 정치인에 의해 확대되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여성 징병제에 대한 선호는 젠더 갈등적이지 않다. 더 나아가 여성 징병제에 미치는 젠더 효과는 세대와 이념에 따라 복잡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젠더 갈등적 시각에 따른 소모적이고 대립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여성 징병제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 요인들을 고려하며 차이를 줄이고 합의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정치권과 학계에서 여성 징병제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 요인들에 관한 추가적인 논의와 연구를 시행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여성 징병제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별, 이념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여성 징병제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관계는 복잡하다. 여성 징병제에 대한 기성세대 남성과 여성의 선호 차이는 젊은 세대 남성과 여성의 선호보다 이질적이다. 예를 들어, 기성세대 여성은 왜 남성과 다른 선호를 보이는가? 기성세대의 여성들이 자녀의 삶을 고려해 남성과 다른 선호를 보이는 것은 아닌가? 즉, 딸을 가진 부모들이 그렇지 않은 부모들보다 여성 이슈에 더 적극적인 지지와 선호를 보인다는 “딸 효과(Daughter Effect)”가 한국에서는 아버지보다 어머니에게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인가? 혹은, 반대로 아들을 둔 어머니들이 아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여 여성 징병제를 선호하는 이른바 “아들 효과(Son Effect)”가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 젊은 세대 남성과 여성이 여성 징병제에 대한 선호가 비슷하다고 해서 그들의 선호에 미치는 요인도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 젊은 세대 남성과 여성이 여성 징병제에 대한 선호가 상대적으로 유사하지만, 그 이유가 다른 이른바 동상이몽(同床異夢)적 태도를 가진 것은 아닌가?

또한, 여성 징병제에 대한 보수층의 여성과 남성의 선호가 진보에 비해서 이질적이라는 발견은 성평등지수와 양가적 성차별주의가 이념과 결합할 때 여성 징병제 선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추가적 연구를 필요로 한다.

여성 징병제 이슈는 안보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적으로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본 연구의 학술적 결과와 정책적 함의가 추가적인 학술적 연구와 정치적 관심을 증대한다면 공론화와 숙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는 기나긴 여정의 중요한 토대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감사원. 2021. “감사보고서 - 저출산·고령화 대책 성과분석 -.”
- 고시성. 2020. “인구 절벽시대 병역자원 감소에 따른 한국군 병력구조 개편 발전방향 연구.” 『한국군사』 제8호, 185-211.
- 구본상. 2021. “성차별 인식은 대선 후보 선택에 영향을 주는가?: 제19대 대통령선거 분석.” 『한국정당학회보』 20권. 2호, 41-82.
- 구본상·최준영·김준석. 2022. “성차별주의(sexism) 중심의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분석.” 『동서연구』 34권. 1호, 39-66.
- 권인숙. 2008. “징병제의 여성 참여: 이스라엘과 스웨덴의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여성연구』 74호, 171-212.
- 기나휘·유계숙. 2019. “남녀대학생의 양가적 성차별주의가 낙태허용도에 미치는 영향과 결혼의향의 매개효과.” 『여성연구』 102권. 3호, 103-129.
- 김기동·이재묵·정다빈. 2020. “성차별주의의 정치적 및 감정적 효과: 한국 유권자들에 대한 실험연구.” 『한국사회학』 54권. 4호, 41-82.
- 김동훈·김법현. 2022. “한국군 병역제도 변화에 관한 사회적 인식 연구: 빅데이터를 통한 모병제와 여성 징병제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6권. 1호, 47-66.
- 김엘리. 2022. “여성징병제 청원을 통해 본 시민자격과 병역.” 『한국여성학』 38권. 2호, 33-65.
- 김정하. 2005. “논쟁과 대안: 여성징병제 논란.” 『중앙일보』 (9월 21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1684645> (검색일: 2022. 8. 16.).
- 남지현. 2021. “‘여성도 징병’ 청원에..靑 “공론화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조선일보』 (6월 18일). <https://v.daum.net/v/clHR3YCT6d?f=p> (검색일: 2023. 4. 14)
- 류숙렬. 2003. “여자도 군대 보내라: 양성 평등한 군대를 위하여.” 『페미니스트 저널 If』 2003년 봄호, 21.
- 마경희·조영주·문희영·이은아·이순미. 2018. 『성불평등과 남성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박경미·한정택·이지호. 2012. “한국사회 이념갈등의 구성적 특성.” 『한국정당학회보』 11

- 권. 3호, 127-154.
- 박상희·김혜숙. 2007. “적대적 및 온정적 성차별주의 남성성에 대한 노출이 사회의 공정성과 자기 지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연차 학술발표논문집 1』, 400-401.
- 박종탁. 2021. “한국의 국방환경 변화와 병역제도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21』 12권. 3호, 2507-2517.
- 박진수. 2018. “여성 징병제 도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한 국방 개혁: 한국·노르웨이·스웨덴 사례를 중심으로.” 『미래정치연구』 8권. 3호, 109-134.
- 박진수. 2019. “한국, 미국, 노르웨이의 여성 징병제 논의와 사회적 갈등 연구: 행위자, 쟁점, 갈등 표출과 해소를 중심으로.” 『담론201』 22권. 3호, 7-54.
- 송영선 외 61인. 200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9월 21일).
- 송윤선·이웅. 2020. “병역환경 변화에 따른 병력충원정책 연구.” 『정책개발연구』 20권. 1호, 27-52.
- 안미영·김혜숙·안상수. 2005. “적대적/온정적 성차별주의와 전제/민주방식의 여성 지도자에 대한 평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권. 2호, 17-38.
- 오세라비. 2018. 『그 페미니즘은 틀렸다: 혐오에서 연대로』. 일산: 줍쌀한알.
- 윤보라. 2013. “일베와 여성혐오: ‘일베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진보평론』 57호, 33-56.
- 윤지원. 2016. “‘모병제 도입’, 세계 주요 국가들의 모병제 현황과 대안 모색: ‘저출산·초고령화’ 시대, 여군의 역할과 병역 확대.” 『국방과 기술』 452호, 76-83.
- 이김정희. 2003. “여자가 군대를 간다면...: ‘여남군대에 대한 꿈꾸기.’” 『페미니스트 저널 If』 2003년 봄호, 86-93.
- 이웅. 2020. “한국군 병력충원체계에 대한 주요 쟁점과 발전 전략: SWOT 분석을 중심으로.” 『정책개발연구』 20권. 2호, 53-90.
- 이한수. 2017. “정책 선호가 후보자 선택에 미치는 영향력의 변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4권. 3호, 221-246.
- 이한수. 2022. “제20대 대통령선거의 분열쟁점과 쟁점투표.” 『의정연구』 28권. 2호, 5-41.
- 조관호. 2021. “미래 병력운영과 병역제도의 고민.” 『국방논단』 1879호, 1-12.
- 조상근·김인찬·홍명숙·유선영·전소민·박상혁. 2022. “노르웨이 성중립 징병제와 한국군에 주는 시사점.” 『문화기술의 융합』 8권. 2호, 197-202.

- Borrell-Porta, Mireia, Joan Costa-Font, and Julia Philipp. 2019. "The 'mighty girl' effect: does parenting daughters alter attitudes towards gender norms?" *Oxford Economic Papers*. Vol. 71, Iss. 1, 25-46.
- Brambor, Thomas, William Roberts Clark, and Matt Golder. 2006. "Understanding Interaction Models: Improving Empirical Analyses." *Political Analysis*. Vol. 14, No. 1, 63-82.
- Dasgupta, Ari, Lan Ha, Spurthi Jonnalagadda, Steven Schmeiser, and Hannah Youngerman. 2018. "The Daughter Effect: Do CEOs with Daughters Hire More Women to Their Board." *Applied Economics Letters*. Vol. 25, Iss. 13, 891-894.
- Fouche, Gwladys. 2013. "Norway Becomes First NATO Country to Draft Women into Military," *Reuters* (June 15). <https://www.reuters.com/article/us-norway-women-conscription-idUSBRE95D0NB20130614> (검색일: 2022. 10. 17.).
- Glick, Peter and Susan T. Fiske. 1996. "The Ambivalent Sexism Inventory: Differentiating Hostile and Benevolent Sex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70, No. 3, 491-512.
- Heywood, Andrew. 2019. *Politics*. 5th ed. London: Red Globe Press.
- Jost, T. John, Christopher M. Federico, and Jaime L. Napier. 2009. "Political Ideology: Its Structure, Functions, and Elective Affinitie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Vol. 60, 307-337.
- McClosky, Herbert and John Zaller. 1984. *The American Ethos: Public Attitudes toward Capitalism and Democrac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Norwegian Ministry of Defence. 2013. "Report to the Storting (White Paper): Competency for a new era. Recommendation." <https://www.regjeringen.no/contentassets/16eb33bcb4b847509f9f7b28f7cfbafa/en-gb/pdfs/stm201220130014000engpdfs.pdf> (검색일: 2023. 4. 14)
- Steinhauer, Jennifer. 2016. "Senate Votes to Require Women to Register for the Draft." *The New York Times* (June 14). <https://www.nytimes.com/2016/06/15/us/politics/congress-women-military-draft.html> (검색일: 2022. 10. 17.).
- The Local. 2016. "Majority of Swedes Back Return to Military Service." (January 4). <https://www.thelocal.se/20160104/swedes-tell-poll-bring-back-military-service> (검색일: 2022. 5. 7.).

Analyzing Voters' Preferences for Female Conscription: Who Supports and Who Opposes?

Jinsoo Park(Duksung Women's University)

Han Soo Lee(Ajou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voters' preferences for female conscription. The preference for the female conscription policy is a complex object and can vary according to gender, generation, and ideology. In particular, we argue that the influence of gender on the female conscription policy differs dependent on generation and ideology. To examine this argument empirically, we analyze survey results regarding the female conscription policy. According to the regression results of this study, women are more likely to agree to the female conscription policy than men, and progressive voters tend to support the female conscription policy than conservative voters. Furthermore, this study shows that the gender effects are more prominent among the old and conservatives.

Key-words: Female Conscription, Policy Preference, Gender, Generation,
Ideology

(투고일 23. 2. 15)

(심사완료일 23. 3. 31)

(게재확정일 23. 4. 6)